

광주 미래 도시계획 시민들이 직접 짠다

2030년 계획안 ... 시민참여단 130명 3차례 회의 열어 설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미래 도시개발 계획을 담는 기본틀을 시민이 직접 짜도록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의 미래 재산권과도 연관 깊은 이른바 고급 정보인 '도시기본계획'은 지금까지 관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시민에 의한 도시계획'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민 130명(청소년 3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첫 회의를 열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8월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 15년 뒤인 2030년 광주개발계획을 최종 설계할 예정이다.

1차 회의는 도시기본계획의 이해와 2030년 광주의 미래, 2차 회의에서는 광주의 이슈, 바람직한 미래 및 앞으로 광주가 해결해야 할 과제, 3차 회의는 광주시의 종합적인 미래상(안) 확정 및 핵심이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시민참여단 회의에서 도출된 계획안은 문화, 경제, 복지 등 6개 분과별 각각 15~20명의 일반인·전문가로 구성된 '계획지원단'을 거쳐 광주시장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시민주도의 계획수립을 위해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초기 단계부터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미래세대 주체인 청소년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추천을 받아 모집했다.

시민참여단은 시민이 직접 광주의 도시 문제를 진단·발굴해 20년 후 광주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형식적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을 시민이 주도하고 광주시와 도시기본계획 용역(회)사는 시민참여 활동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주 임무다.

5년 단위로 이뤄지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도시의 미래상(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주택, 기반시설, 교통, 공원녹지 등 물리적 공간 부문과 사회·경제, 환경·에너지, 문화, 복지, 교육 등 비물리적 분야를 포함해 도시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시는 시민들과 함께 2030년 광주를 광역 거점도시로 확대하고, 국토·도시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을 담아내자는 계획이다.

김명섭 광주시 도시계획담당은 "광주의 주인은 현재도 미래도 시민이라는 시정 철학을 반영해 도시계획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내수를 살리자 ... 올 여름 휴가는 남도로 오세요" 21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지역경제활성화 동참 및 서비스 점프 업 결의대회'에 참석한 코레일 직원들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플래시몹을 펼치고 있다. 메르스로 침체된 국내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주관한 코레일 광주본부는 휴가철을 맞아 남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제1호 내달 지정된다

산림청, 수목원·정원 조성 법률 시행



순천시 순천만정원이 이르면 내달 중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된다.

앞으로 정원을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고, 국가가 정원 조성을 지원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정원을 국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정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원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고, 산업적 성장 잠재력이 커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정원시설이나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원관련법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다.

정원법은 정원을 조성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고, 정원조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원 관련 규정이 새로 추가되면서 법률의 명칭도 종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정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원진흥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정원의 산업화 진흥과 정인지원, 정원박람회 지원, 정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인증 등 정원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들 제도가 정착되면 정원식물 생산과 유통, 정원디자인, 정원 조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일자리가 창출

되고, 관광자원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더불어 국민에게 휴식, 치유공간을 제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정원 가꾸기에 대한 가족·학교단위 자연체험과 교육으로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노인·청소년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정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를 중심으로 정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정원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재조명한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정원산업은 재배·생산 등 1차산업에서 산업유통, 관광, 교육, 체험 등 6차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인 만큼,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강진 51.75km 내년 7월 착공

광주~완도 고속도로 공사

■ 광주~강진 구간(51.75km)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구간 중 사업계획이 확정된 광주~강진 구간이 내년 7월 착공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애초 2017년 3월 착공하려던 광주시 서구 벽진동에서 강진군 작천면까지 이르는 51.75km(4차로) 구간을 2016년 7월 착공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9월까지 터널과 교량 등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하고 전남도와 협의한 뒤 내년 7월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완공 시점을 애초 2020년에서 그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착공시점을 2016년 7월로 앞당긴다고 해서 반드시 완공 시점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확보해 2020년 이전에 완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강진 구간의 총 사업비는 1조 4247억원으로 7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추진된다. 나들목은 광주 벽진동, 강진군 작천면 고속도로 시·발점을 포함해 동나주, 남나주, 동영암 등 총 5곳이다. 휴게소는 나주와 월출산 등 2곳이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강진군 작천면에서 해



남읍 남창면(완도군과 경계)까지 17.8km 구간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광주~강진 구간을 착공한 뒤 해남까지 고속도로를 연장해 광주~완도 고속도로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 빛을 가져와요
피부에 닿을 때마다 빛이 되어드리고
속에서 어린 피부를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